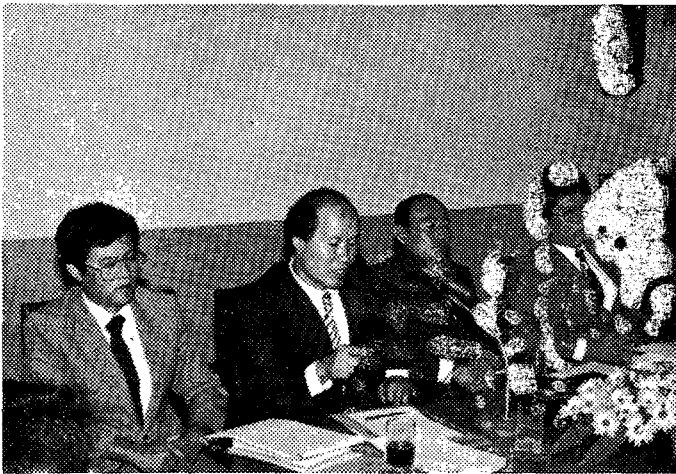


환경보전지역간담회

때 : '87년 9월 24일 2시
곳 : 春川商工會議所
주최 : 本協會江原支部

開發과 保全사이의 딜레머 江原地域



左로부터 차승환과장 (원주환경지청), 안기희부장 (本協會개발부), 전춘길국장 (춘천상의), 안웅린사무관 (환경청)

司會 - 全春吉 (春川商議 事務局長)

그간 우리 강원지역은 환경 오염방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곳 春川지역은 북한강 상류

이고 호반이 많아 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으로도 묶여 있다. 또한 군사지역인 관계로 개발이 제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건 간에 춘천지역은 개발되기도 전에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문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띤 우리 지역 환경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탄없는 여러분의 고견을 바란다.

기조발언 - 안기희 (本協會 개발부장)

환경보전문제가 事前 예방정책으로 바뀌면서 春川지역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위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以後에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우기 地自制가 실시되면 「환경보전지구 지정」 문제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 문제가



춘천지역은

환경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제기되어

다른 대책이 요구

되고있다



침예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와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의 어려움을 논의, 정책입안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本協會가 건의할 테니 의견을 제시 바란다.

問 - 민춘기 (春川정비사업 조합 전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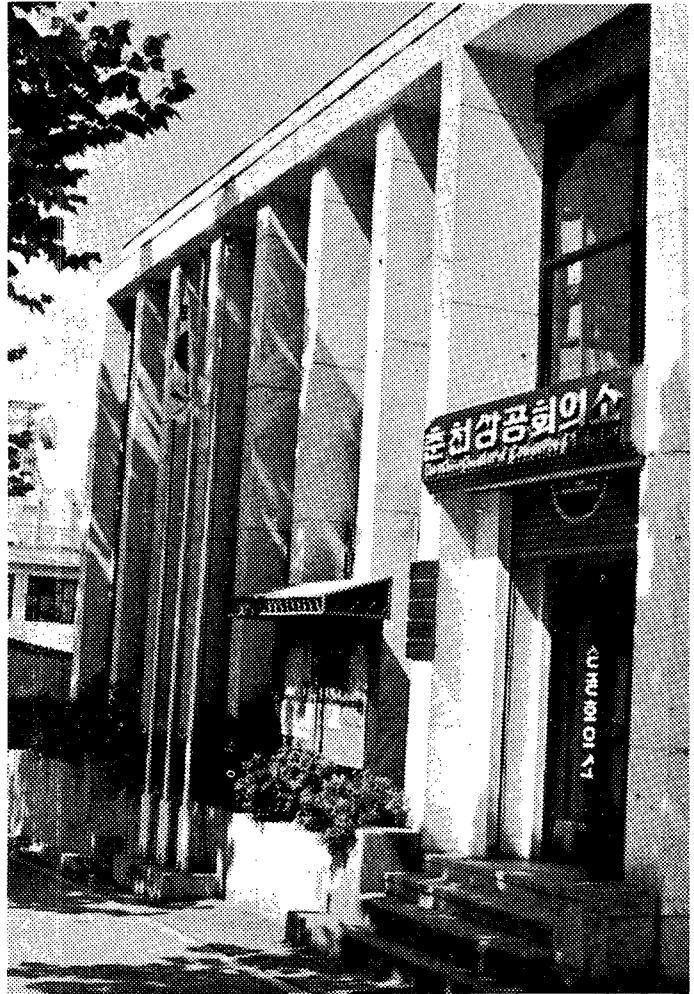
며칠전 신문에 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업소 5백여곳이 무더기 적발돼 신문지상에 대거 공



개됐는데 이렇게 공개하기 이전에 행정지도를 강화, 공해방지기술을 습득시켜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가?

답 - 차승환 (原州환경지청 지도과장)

각 지청에서는 위반업소를 고발하기 이전에 각 배출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한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은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편후, 이에도 불응거나 위반할 경우 고발·공개하고 있다.

問 - 김근성 (주식회사 한국 라텍스 환경관리기사)

우리 업소는 지난 6월경 기준치 초과로 고발을 당해 일정 금액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



그런데 우리 업소는 항상 자가측정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도 기준치 이하였다. 시설 또한 정상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준치 초과로 판정받았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 해도 무척 까다롭다.

이의신청 간소화와 업소의 자가측정 결과를 반영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 - 김주희 (서울환경지청 춘천지역환경점검반장)

점검반에서는 항상 점검하기 이전에 많은 홍보를 통해 기업측 스스로가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工團協議會를 통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한 라텍스의 경우 질문하신 환경관리기사분은 최근에 입사해 상황을 잘 모를 것이다.

본 점검반에서 점검하기 이전인 지난 초여름 공단협의회



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었다. 많은 업체 대표들이 참석, 점검반의 점검 방향을 숙지했었는데 라텍스의 경우는 불참했었다. 그래서 점검시 불참업체를 먼저 했다. 6월 비가 많이 올 때 同社를 점검했는데 同社는 무단방류를 하고 있었다. 실험 결과 SS, BOD 모두 9백을 넘었다. 라텍스는 현재는 환경관리기사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관리인이 없어 점검반이 애를 먹었다. 라텍스 측으로선 다행히 고발됐을때 舊法이 적용돼 부과금을 20 만원정도 물었지만 지금과 같이 新法이 적용됐다고 할시에는 천만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다.

우리 점검반에서는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일은 없으며 측정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의사진행 - 안기희

이의 신청의 경우 점검반과 자가측정 혹은 자가측정대행자

의 점검치가 다를 경우 이치에 대한 제 3의 중재기관이 없다. 앞으로 “協會”같은 곳이 제 3의 측정기관으로 중재가 가능토록 법개정 건의를 하겠다.

보충발언 - 김주희

측정치는 샘플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업체는 철저한 관리를 하거나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시 좀더 투자를 확대 항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해 분쟁의 시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問 - 이호섭 (韓國電力 江原支社 사무과장)

방지시설 설치후 市·道보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시설을 정상가동시켜 완벽한 시설·처리를 자부해 왔다. 자가측정결과도 항시 양호했었다.

그런데 단속 결과는 기준치 초과임을 통보 받았다. 이 경우



보건연구소와 지청간에 측정치가 차이 나는데 검사를 일원화시키든가, 그것도 아니면 완충역을 맡을 수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 같다.

답 - 김주희

측정시 어려움은 항시 염두해 두고 있다. 기준치가 100 이라면 측정치가 101~102가 나오면 실험을 다시 한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를 하거나 시설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 시비 거리를 없애는게 바람직 할 것 같다. 또 미리 자가측정치를 제시하는 방편도 필요하다.

問 - 이강민 (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 사원)

방지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미가



동중 생산을 위해 작업을 계속해야 될 경우 부득이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 김주희

그럴 경우는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준치가 100 이고 기계 고치기전의 오염치가 180 이라고 하면 오염분에 대한 부과금을 별도로 내고 조업은 계속할 수 있다.

問 - 황선명 (주식회사 하나식품 대표이사)

우리 강원도는 山水가 수려하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그 어디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경제 활동을 위해 지역소득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미 제도적으로 환경보전지구나 그린벨트지구로 묶여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춘천의 경우 15~20년전만 하더라도 수원, 마산, 울산등에 비할바도 안되는 큰 지역경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경제가 거의 없다시피한 군소도시로 전락할 형편이다.

더우기 이내 지방정부(地自製)가 실시되면 환경보전은 우리가 하고 그 혜택은 서울시민이나 수도권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수익을 들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등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의 재정으로 보아 불가능한 형편이니 그러한 시설금을 수혜된 곳의 시민이 내야 될 것이 아닌가?

단적인 예로 우리 지역은 관광지가 많아 수도권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하지만 이들은 먹고 마시고 버리는데에만 열심이지 자기가 버린것을 되가져 갈줄은 모른다. 그들이 버린 폐기물을 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 처리하고 있는 우리로선 관광수입보다 보전을 위한 지출이 많은 형편이다. 이는 바로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다.

첫째, 환경보전을 위해 들어가는 제반비용(하수처리장건설, 호반수질개선 비용, 유원지 폐기물처리비용등)을 수혜자가 부담하거나 중앙에서 지원해 달라. 아니면 환경보전지구를완

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달라.

둘째, 현재의 의암댐은 없어도 된다고 본다. 그 의암댐을 가동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형편없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니 환경보전을 위해 서라도 받아드려지길 바란다.

현재 의암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36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다.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시커먼 퇴적토가 쌓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막아서 수질을 악화시키느니 차라리 열어서 수질을 보전하고, 금강산댐으로 인한 공략에도 대비하자.

셋째, 우리회사는 방지사설을 가동키 위해 전기료만 한달에 1백 20 만원이 들고 있다. 따라서 전기료가 너무 비싸니 대폭 인하해 달라.

넷째, 정부에서는 너무 배출업체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목욕탕을 가보면 엄청난 세제류의 방류가 웬만한 업체의 오염물질방류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70%에 달한다는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도 세워 달라.

답 - 안응린(환경청 환경정책국 사무관)

강원지역의 환경보전 문제와



관련한 지역경제 위축은 공감하는 바다. 강원 도민이 깨끗한 물을 지켜주므로써 수도권

인구가 청정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특히 地自製가 실시될 경우 이곳은 타지방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면이 있는데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원의 적정한 분배에서 해결되려야 한다고 믿는다.

유원지 쓰레기문제는 本廳이 계속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홍보라는 것이 정량화되지 않는 흠이 있어 당장 나타나는 무엇은 없다. 앞으로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전개해 쓰레기 없는 유원지를 만들겠다. 세계문제도 계속 연구 검토·단속할 계획이다.

답 - 김주희

私見이지만 의암댐문제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순다는건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다.

전기료 인하의 경우 韓電측이 너무나 많은(천억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廳에서도 전력사용량을 뽑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는 중으로 안다.

보충발언 - 황선명

의암댐을 부수라는게 아니라 水門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問 - 최규열(강원도 보건연구소 공해과장)

방지사설을 해놓고 기술감리를 받는 경우 그 공정성을 위해 감리를 공공단체(예를들어 협회)가 해야한다고 본다.

답 - 김주희

기술감리는 기업측의 사람이 모여 감리위원이 된다. 따라서 廳은 정리역할을 할 뿐이다.

問 - 최규열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규제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가 쓰라고 한 석유류에 국가가 형식승인 및 품질을 승인한 보일러등으로 국가가 인정한 기사를 두고 운용하는데 단속한다는 것은 우습다.



자동차 매연가스도 마찬가지다. 원인자인 會社측이나 석유회사측에서 배기가스 억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당초 탈황

시설을 갖추어 생산한다면 왜 소비자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때문에 현재는 기술수준이 모자란 상태에서 법만 강화됐다.

문제가 되는 자가측정을 없애고 아예 廳에서 하는건 어떤가? 자진신고시 부과금 또한 무리가 있다. 자진신고를 했는데 왜 부과금을 물리는가?

答 - 안기희

연료규제 문제한 질의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 그러나 석유를 땔때는 합격이다 하더라도 고무를 때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사용자가 정비를 잘못해 배기가스가 배출되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 검토해 보도록 協會가 정부에 건의하겠다.

答 - 김주희

자가측정을 관공서가 한다는 건 어렵다. 인력·장비 모든것이 재편되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자진신고의 경우 부과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도 환경문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어렵다.

全春吉 (춘천상의 사무국장)

참으로 유익했다. 앞으로도 계속 토의해 부적당한 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기르자. 특히 우리道の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논리 속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協會와 廳이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정리 : 전정희>

환경만평 9

漁物塵 亡身을 ...

